



EAI 여론브리핑 제33호

[엠바고 6월 18일 21:01 세계표준시, 한국 시간 6월 19일 오전 6시]

WPO • EAI • 경향신문 공동
UN인권선언 채택 60주년 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WORLDPUBLICOPINION.ORG

제8차 낙태권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표집필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참여국가 : 18개국]

유럽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아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북남미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중동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이란 터키 팔레스타인 이집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8개국 18,465명 응답자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 조사일시 : 2008년 1월~4월/ 한국조사 “한국리서치”

[발표 주제]

1. 세계적으로 낙태권 인정여론 높아
2. 한국인의 낙태인식 : 사회집단별 인식편차, 20대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요구 커

[발표계획]

차수	한국발표	주제	비고
1차	3월 8일	인권1. 여성권과 양성평등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2차	3월 20일	인권2. 중국의 티베트 정책	6개국 조사
3차	3월 22일	인권3. 인종차별	3월 21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4차	4월 21일	현안1. 오일쇼크의 위협	국제유가 폭등
5차	5월 2일	인권4. 언론의 자유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6차	5월 13일	현안2.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 여론/ 거버넌스 인식 비교
7차	6월 16일	현안3. 세계지도자 평가	글로벌/지역 지도자 신뢰도 평가
8차	6월 19일	인권4. 낙태	낙태권에 대한 세계인식
9차	미정	인권5. 정부의 고문 인식	6월 26일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프로젝트 개요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 프로그램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 (UN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종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조사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권 문제 관련 국제여론조사로서 인권 및 여러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UNHCHR(유엔고등인권판무관)의 요청에 따라 주요결과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정한 인권 관련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주제별(양성평등/인종차별/언론의 자유/고문/낙태/정치적 민주주의 성숙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관련 주제 외에도 국제현안(석유에너지 자원/ 세계 및 지역별 지도자 리더십 평가/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중동평화와 유엔의 역할/새로운 핵 폐기 국제규약 창설에 대한 입장/ 중국과 티벳)에 대한 국제여론도 소개한다.

2008년 3월 7일

경향신문

EAI 여론분석센터 국제인권의식조사 연구팀

한국조사 개요

- 전체기획 :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 Network)
- 한국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 경향신문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일시 : 2008년 2월 10일~11일
-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제주 제외)
- 표 본 : 600명
- 표본추출 : 층화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 ± 4.0%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 • 성별 • 세대 가중치 부여
- 연 구 팀
 - 연구팀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 연 구 팀 :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 이근수(EAI 거버넌스센터 부소장)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간 사 : 곽소희(EAI 연구원)
- 연구지원 : Lisa Collins(EAI 인턴) • Matt Lauer(EAI 인턴)

관련문의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02-2277-1683(내선102)



I. 세계적으로 낙태권 인정 여론 높아

18개국 중 17개국에서 사법적 처벌은 소수의견

- 개인판단에 맡겨야 52%, 정부 개입해야 41%
 - 이슬람 국가 / 법적 규제 있는 나라에서 정부 개입 여론 높아
 - 저학력 · 저소득층에서 정부 개입 여론 높아
 - 남녀간 인식차이는 없어, 20대에서 정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 높아
- 정부개입 수단으로 사법적 처벌(43.9%) 보다는 제도적 수단(교육/상담/사회 프로그램을 선호(56.1%).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 EAI ·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세계 18개국 18,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국제여론조사 결과 세계인의 52%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조사결과 18개국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17개국에서 11개국에서 낙태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개인에 맡기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특히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프랑스(95%), 영국(81%), 미국(69%), 우크라이나(70%), 러시아(62%), 중국(67%) 등에서 낙태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나머지 7개국(이집트, 팔레스타인, 인도, 이란, 태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서 개인판단보다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나라는 대체로 이슬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거나 대체로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다.

낙태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8개국(나이지리아, 멕시코, 이란, 이집트, 팔레스타인, 폴란드, 한국) 중에서도 폴란드(66%), 멕시코(70%) 그리고 한국(62%)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사법체계와는 달리 낙태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에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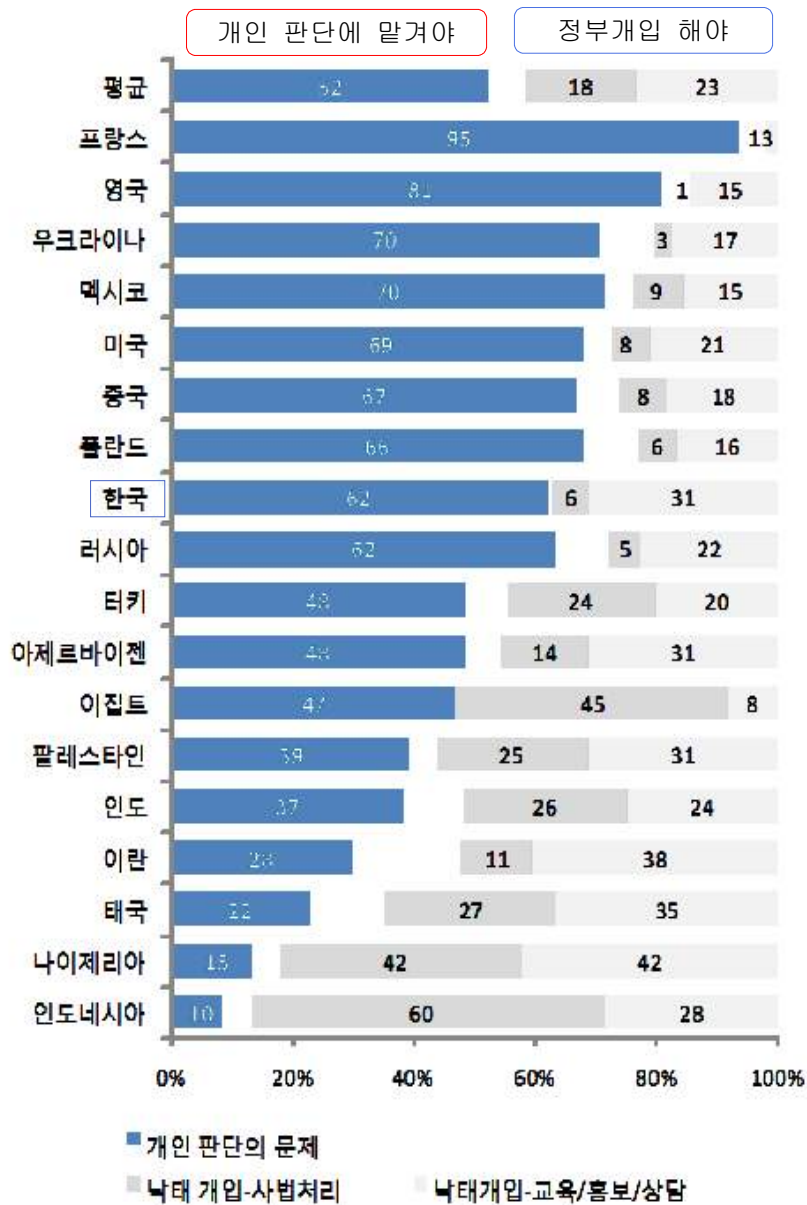
세계 대부분의 종교들이 낙태를 불경 시 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비교적 낙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기독교인의 다수(65%)는 낙태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개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본 반면, 이슬람교도의 다수(59%)는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낙태를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낙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낙태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응답이 교육수준이 낮은(고등학교 미만) 응답자 층에서는 46%였지만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60%에 달했다. 그러나 남녀 간에는 의미 있는 인식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20대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48%로 전체 응답자 평균 41%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 중에서도 사법적 처벌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데에는 거부감이 많았다. 교육이나 상담 등의 계도(啓導)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낙태라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좀 더 많았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들 중 56.1%는 계도 수단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사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43.9%였다.

[그림1] 낙태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인식





Ⅱ. 사회계층별 낙태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편차

- 남녀 성별 간 인식차이는 없어,
- 30대 · 고학력 · 중산층 · 불교에서 낙태권 인정비율 높아
- 낙태에는 형사처벌, 20대 32.7%, 30대 17.5%, 40대 14.0%, 50대 이상 7.4%
- 정부 개입하더라도 사법적 처리에는 강한 거부감

한국인 사이에서도 역시 낙태권을 인정하자는 여론이 많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62%가 낙태문제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자고 답한 반면 37.3%만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법적 처리보다는 교육 및 상담 등 계도적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18개국 전체조사에서도 계도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56.1%로 다수였다. 한국은 사법처리보다 계도적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이 특히 강했다. 낙태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불과 16%만이 낙태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지했다. 반면 계도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84%로 압도적이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낙태가 처벌의 대상으로 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낙태가 사법적 처벌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낙태문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간 인식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낙태권을 존중하자는 입장이고 남성의 61%, 여성의 63%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득집단, 종교별로는 인식의 편차는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월소득 200만원~400만원 미만의 중산층과 고졸 및 대재 이상의 학력 층에서 다른 계층집단에 비해 낙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여론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던 계층으로 낙태를 개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층으로 볼 수 있다. 종교 별로 보면 불교신자들의 67%가 대체로 낙태문제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 강했지만 천주교 및 개신교도의 경우 각각 55%로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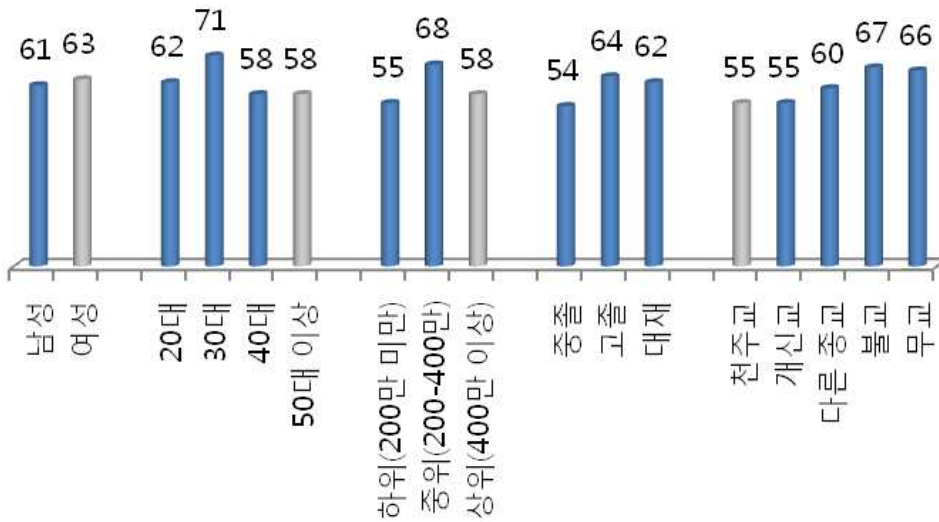
세대별로 보면 역시 40대, 50대 이상에서 낙태권을 인정하는 입장이 58%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았다. 30대에서 71%로 가장 높았다. 주목할 점은 20대는 30대와 달리 낙태문제를 개인이 판단할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으로서 윗세대에 비해 20대에서 낙태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정부개입의 수단 중에서도 사법처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높았다. 20대 32.7%, 30대 17.5%, 40대 14.0%, 50대 이상 7.4%였다.

20대에서 낙태권에 대한 유보적 태도가 높고 낙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낙태의 부작용을 20대가 가장 실감하고 있는 탓일 수 있다. 이전 세대들에 비해 현 젊은 세대들은 보다 손쉽게 낙태를 결정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되면서 낙태로 인한 병리현상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20대에서 낙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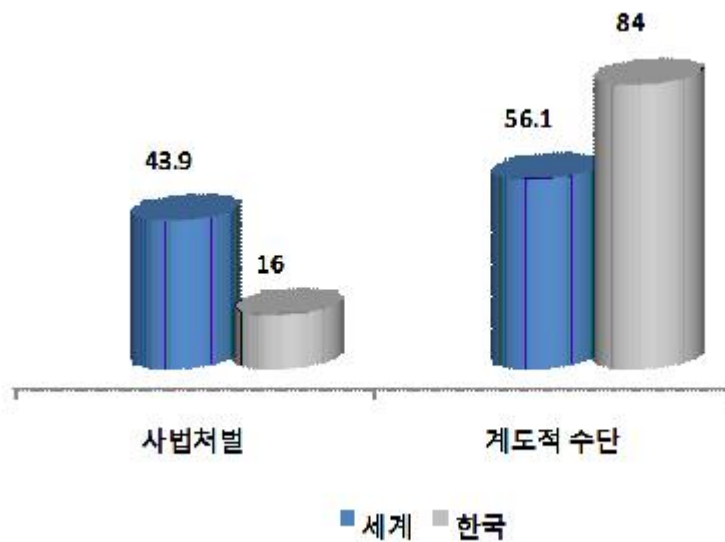


낙태권은 이미 국민들 인식 속에서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하지 않는 출산의 피해가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규범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지 낙태 자체를 권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낙태권의 인정은 여성권의 신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낙태의 확산이라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1] 낙태는 개인에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림2] 정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정부 개입 시 선호수단(%)





[그림3] 세대별 정부개입 선호 응답자 중 '낙태 시술자/낙태자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비율(%)

